

지원금 부정수급 ‘혈세 줄줄’…환수율은 저조

지난해 광주 2,943·전남 2,104건
코로나 이후 각종 지원 제도 악용
조사 인력 한계…예방·단속 절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위조 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자진신고와 내부 고발로 이뤄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광주 2,943건, 전남 2,104건이다. 광주는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약 8억3,00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3억원이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해 4억5,000만원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1억2,000만원 늘었다. 반면 부정수급 환수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환수율은 2020년 90%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85%, 올해 5월 현재는 78%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해까지 90% 이상의 환수를 나

타냈지만 올해는 74%까지 뚝 떨어졌다. 부정수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인원, 규모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지원·보조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광주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전세버스 업체 6곳을 적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경영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한 운수 업체는 운전사 10여 명의 8개월분 직원 급여 명목으로 4,000여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 업체는 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신청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 지난 1월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1억 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 B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국가보조금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자가 몰리는 점을 악용했다. A씨와 B씨는 사업주와 구직자를 모집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고 소개료와 수익을 배분하

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영업자 김모씨(32)는 “어떤 사업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데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코로나19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국민 세금이 편법으로 줄줄 새고 있는 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사전 예방과 단속이 시급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부정수급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사전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하기에는 인력에 한계를 느껴 데이터 분석 기법, 고용보험수사관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지원금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 대면면회 잠정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태규 기자

요양병원·시설 25일부터 접촉면회 안된다

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책 발표

이틀 연속 7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20일 4,000여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 시

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를 적용한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검사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한다. /연할뉴스

‘의회 사무국장’ 임명권 충돌…인사 갈등 심화

북구-의회, 팽팽한 기싸움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가 올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의회 사무국장(4급)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인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행부에선 4급 승진 인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청장은 이날 올 하반기 인사시행 예고를 통해 5급 3명과 6급 13명 등 승진 102명을 발표했다. 현재 고참급 국장을 중심으로 4급 승진대상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인사시행 예고안에서 4급 승진자는 제외됐다. 이는 퇴직을 앞둔 의회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집행부와 북구의회간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에서는 2년간 인사교류와 7급 1명 파견 조건을 내세워 의회 사무국장 임명 권한을

달라는 반면 북구의회에서는 1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구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시한 인사교류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향후 의정단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4급 승진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간 충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집행부 소속 4급 승진 인사는 이번 인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달성 북구의원(운영위원장)은 “현 의회 사무국장인 이달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후임 인사를 두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비협조로 집행부 인사에 차질이 빚어진 것 처럼 이기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자리가 집행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사무국장을 직접 채용하거나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집행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최환준 기자

‘신입생 미달’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

학생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광주 명진고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구 소재 여고 사립학교인 명진고는 지난달 남녀 공학 전환 신청서를 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명진고는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

유로 AI(인공지능) 선도 학교로서 남학생에 대한 수요가 있고, 여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꼽았다. 명진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226명 중 120명만 채웠다. 2022학년도에는 정원 285명 중 51명만 채우는 등 신입생 미달 사태가 심각하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tr><td>광주</td><td>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tr><tr><td>전남</td><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tr><tr><td>시외</td><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tr></table>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